
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(안)

2021. 3. 30.

기 획 재 정 부

순서

[제1편 202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]

I. 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	2
II. 202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	5

[제2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]

I. 기금운용 여건	29
II.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	30

제1편
202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

1. 재정운용 평가

□ 위기상황下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실시

- 글로벌 저성장과 코로나 위기대응,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선도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재정지원 추진
- 위기이후 확장적 본예산 편성, 5차례 긴급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재정의 '강한 버팀목 역할' 수행

* 총지출 증가율(본예산/추경, %): ('17) 3.7/ 6.1, ('18) 7.1/ 8.0, ('19) 9.5/10.9, ('20) 9.1/18.1, ('21) 8.9/11.9

□ 적극적 재정투자로 국정과제 이행 및 위기 대응을 뒷받침

- 기초연금 확대,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폐지, 고교 무상교육,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주요 국정과제는 조기 완수·규모 확대
 - *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,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, 고교 무상 교육 전면도입 시기 단축('22→'21년), 공적임대 '18~'20년간 51만호→57만호 공급 등
-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피해계층에 대한 4차례 맞춤형 피해지원 및 감염병 대응 강화 등 K-방역과 백신 도입을 총력 지원
- 선도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BIG3, 소재·부품·장비 등 혁신성장에 중점 투자

□ 국가채무, 재정적자는 위기대응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 추세

- 기민하고 효율적인 재정투입·운영을 통해 주요국 대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위기대응에 적극 기여
 - * '20년 성장률(% IMF): (韓)△1.0 (美)△3.4 (中) 2.3 (日)△5.1 (獨)△5.4 (佛)△9.0
- 그러나,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예전보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정수지 적자도 확대되는 추세

* 국가채무비율(%) : ('18) 35.9 ('19) 37.7 ('20本) 39.8 ('20추경) 43.9 ('21) 47.3

2. 경제·사회 여건

□ [경제여건]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부문별 회복속도 격차

- 세계 경제는 회복 흐름이 예상되나, 미중 갈등과 주요국 정책 기조 전환 등 불확실성이 상존

* 세계 성장률(IMF, %) : ('19) 2.8 → ('20) △3.5 → ('21) 5.5 → ('22) 4.2

-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으나, 내수 및 고용 회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

* 국내경제성장률(IMF, %): ('19) 2.0 → ('20) △1.0 → ('21) 3.1 → ('22) 2.9

□ [구조적여건] 산업 및 고용분야의 구조적 변화 가속화

-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·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, 우리의 IT·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
- 산업·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위축되는 전통제조업·자영업 등의 원활한 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, 인력 재조정 등 적극 뒷받침 필요

□ [재정여건]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속과 재정의 힘 비축 필요

- 정상적 경제성장궤도 진입,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혁신과 포용 투자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선도적 역할이 지속 요구되는 상황
- 동시에 세입여건의 불확실성,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 추세 등 재정 위험에 대비,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본격화 필요

* 증가소요기간(년) : (10→20%) 34 (20→30%) 7 (30→40%) 9 (40→50%) 2 (50→60%) 3

3. '22년도 예산의 의미 및 기본방향

□ **(의미) 국정성과의 완결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견인하는 예산**

- 국정과제의 이행을 완료하고, 한국판 뉴딜의 착근 등 지금껏 추진해온 핵심 정책과제의 이행을 속도감있게 뒷받침
-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나가기 위한 디지털·탄소제로 경제로 이행에 필요한 선도적 투자를 본격화하는 예산

□ **(기본방향) 활력·혁신·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 +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관리·재정혁신**

- ❶ **(경제활력)** 경제 정상화를 공고히 하고 재도약을 다지는 핵심 프로젝트 집중 투자
 - 내수·고용 플러스 대전환, 비대면·신시장 수출 선점, 글로벌 SOC 경쟁력 강화, 지역뉴딜·특화산업 등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지원
- ❷ **(미래혁신)**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중점프로젝트 추진
 - 빅데이터·인공지능 전산업 확산 등 디지털 뉴딜,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그린뉴딜, DNA·BIG3 등 미래혁신산업 생태계 조성
- ❸ **(민생포용)** 코로나위기·디지털경제화로 부문별 격차가 심화되는 新양극화 대응을 위한 소득·고용·주거·교육 안전망 강화
 - 저소득·취약계층 소득개선, 플랫폼 종사자 등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, 공공임대 등 서민주거안정,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등
- ❹ **(재정혁신)** 세입·세출·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
 - 국세·세외수입 등 세입 기반 확충, 민자유치 활성화, 위기대응에서 미래대비 투자로 전환하는 강력한 지출혁신 및 구조조정
 - 재정총량 관리 강화, 협업예산 전면 확산, 재정사업평가와 예산편성간 환류 강화

목표

경제 정상궤도 진입과 포용적 선도국가 전환 가속화

기본
방향

활력·혁신·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
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관리·재정혁신

4
대
투
자
중
점

1.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

- 고용·소비·투자 플러스+ 대전환
- 비대면·신시장 맞춤형 수출 지원
- 광역교통망 등 글로벌 SOC 경쟁력 강화
- 지역균형뉴딜 등 국가균형발전 추진

2. 미래 혁신투자

-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뉴딜 강화
-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
- 신산업소부장 등 R&D 핵심성과 도출
- 벤처·스타트업 스케일업·글로벌화
- 문화·콘텐츠·소프트파워 강화



3. 민생·포용기반 구축

- 소득·고용·교육안전망 중층적 보강
- 공공임대 등 서민주거 확충
- 노인·장애인 일자리·돌봄 맞춤형 지원
- 저출산 반등 5대 패키지

4. 국민 안전과 삶의 질

-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보강
- 물·공기·자원순환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
- 산업재해·생활안전 예방대응시스템 보강
- 첨단무기체계 기반 스마트강군 육성

재정
혁신
과제

강력한 지출혁신·구조조정

- 위기대응 한시지출 정상화
- 전략적 재원 재배분
- 재량지출 10% 구조조정
- 보조·출연·출자사업 정비

안정적 세입기반 확충

- 국세세외수입 증대 노력 강화
- 기금·여유·재원·재정·성자금·재원 적극 활용
-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

재정의 효율성·지속가능성

- 다부처 협업예산 전면확산
- 프로그램단위 성과목표관리 등 재정환류체계 강화
- 중장기 재정총량관리 강화

1. 자원배분의 중점

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

- 서비스 중심의 내수 촉진을 위한 스마트상점·공방 등 소상공인 스마트·온라인화,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상품 등 관광업계 디지털화
- 비대면·저탄소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·그린 분야 「신규일자리, 신기술 직업훈련, 전직·재취업」 지원 프로그램 확대
- 포스트코로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유동성을 공급하고,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진출, 비대면 맞춤형 수출 등 디지털 역량 강화
-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철도(GTX 등), BRT·환승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및 스마트시티 보급·확산 지속 지원
-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중심으로 한국판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,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화 및 지역소멸대응·혁신도시 2.0 지원

② 미래 혁신투자

-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, 공공데이터 구축·개방 등 빅데이터 빅뱅을 선도하고, 도로·철도 IoT 및 스마트홍수관리 등 SOC 원격제어기반 구축
-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전환 등 혁신기술개발 및 친환경차 보급을 집중 지원하고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재정지원체계 정립
- 제조현장 디지털·脫탄소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·그린산단 확충 및 탈탄소 공정전환을 촉진하고, 스마트팜 보급·수출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
- 산업수요 맞춤형 글로벌·지역·실무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·지역·산업 협력사업 투자 확대 및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지원
- 미래차 등 신산업, 소부장 자립화, 코로나 백신 개발, 에너지 전주기 효율화 등 R&D 성과가시화를 위한 핵심과제 중점 지원
- 벤처·창업강국 도약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, 지역 기반 창업·투자생태계 조성 강화
- 문화산업 육성 및 K-한류 글로벌화 선도,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전환 등 문화강국 도약으로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

3] **민생·포용기반 구축**

-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,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도입,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위기아동·청소년 지원 강화
-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예술인·특고에 이어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신규가입 지원,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
-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 고도화 및 전문대학의 지역 연계 직업교육 강화, 문화취약계층 대상 문화바우처 지급 확대
-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, 중형평형 확대,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품질개선 중점지원
- 노인일자리 확대, ICT 기반 돌봄서비스 확충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소득·일자리 지원체계를 보강하고,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
-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수당 신규도입, 첫만남 축하바우처, 공동육아휴직 인센티브 등 패키지 지원

4] **국민 안전과 삶의 질**

-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주기(검역-예방-치료) 방역 시스템 보완 및 공공의료 필수인프라·인력 보강 등 추진
- 교통안전환경 개선 및 노후방재시설 투자 등 생활안전을 적극 지원하고, 상시화된 재난·재해에 대비한 지원체계 도입 검토
- 아동·노인학대, 고독사, 자살 등 3대 정신건강 위협요인에 적극 대응하고,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투자 지속 확대
- 상수도 스마트화 등 안전한 먹는물 공급, 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처리시설 확충,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저감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집중 투자
-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무기체계 자립화, 군장병 교육·훈련프로그램 과학화 등 스마트 강군 육성 중점 지원
- 한반도 평화공조를 위해 전략적 양자·다자 외교 협력강화 및 인도적 남북교류협력, 한반도 생명·안전공동체 기반 조성 지원

【 「활력/혁신/포용/안전 2022」 12대 핵심 프로젝트(예시) 】

1. 전방위적 경제**활력** 제고

① 자영업 등 고용구조전환 패키지

- ▶ 디지털·그린 등 신규 일자리 창출 + 신기술 직업훈련
+ 자영업자 전직·재창업·스마트화 지원 +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

② 글로벌 SOC경쟁력 강화 프로젝트

- ▶ 광역교통망(광역철도 등) + 스마트물류 +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

③ 지역균형·재도약 프로젝트

- ▶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+ 지역대학·산업연계 인재육성 + 지역특화산업 육성 + 농어촌공간 정비

2. 미래 선도국가 **혁신** 투자

④ 전산업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

- ▶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+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+ 「AI-X」 전산업 확산 + 5G 기반 AR·VR 콘텐츠

⑤ 탄소프리(CO₂-free) 경제·사회 인프라 구축

- ▶ 에너지·산업·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+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생산·유통·소비 인프라 확충
+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

⑥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·벤처 육성 프로젝트

- ▶ 스케일업(혁신금융, 사업화 지원 등) +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+ 지역기반 창업허브 구축

3. 민생회복 **포용**국가

⑦ 맞춤형 소득·주거·고용·돌봄안전망 구축

- ▶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+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지원 +
예술인·특고·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지원 + 인공지능·ICT 기반 취약계층 돌봄건강관리 시스템 구축

⑧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K-교육 고도화 프로젝트

- ▶ 인공지능기반 초중등 원격교육플랫폼 + 8개 사이버 공유대학 + 평생교육 직업역량 배가 프로젝트

⑨ 저출산 5대 패키지 지원

- ▶ 영아수당 신설 + 첫만남 축하바우처 + 부부 공동육아휴직 인센티브 + 공보육 확충 + 다자녀가구 주거안정

4. 국민 **안전**과 삶의 질

⑩ 사회위험요인 3+3 극복 프로젝트

- ▶ (국민생명지키기) 교통안전 + 산재예방 +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
(신종 사회위험요인) 신종 감염병 대응 + 아동·노인학대 방지 + 취약계층 인권 증진

⑪ 먹는물·미세먼지·폐기물 등 생활환경개선 3대 프로젝트

- ▶ 스마트 상수도·정수장 고도화 +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+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

⑫ 군장병 스마트 역량 강화

- ▶ 군장병 IT 요원화 + 훈련 과학화·디지털화 + 국방분야 4차산업혁명전문가 육성

2. 재정 혁신: 세출·세입·재정제도 전반 실효성 제고 전략

□ [전략 1] 강력한 지출구조조정

① 한시지출사업 단계적 정상화

-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·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(zero-base) 재검토하고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

< 코로나 종식후 정상화 필요사업 (예시) >

- ❶ 정책금융기관 등 출자 : 한국판 뉴딜 등 미래대비 정책금융 지속 지원하되, 위기사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펀드·융자·보증 등은 축소
- ❷ 고용유지 지원사업 등 : 위기대응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사업 등을 고용상황 개선시 안정화
- ❸ 소비회복 프로그램 등 : 내수회복을 위해 한시시행 또는 확대된 소비촉진사업 적정화(예: 농수산·문화·관광 바우처·쿠폰, 지역사랑·온누리상품권 등)

② 사업여건·우선순위를 감안한 전략적 재원 재배분

- 정책 환경 및 사업수요변화에 따라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축소·폐지

* 예: (탄소중립) 화석연료 사용촉진사업 단계적 축소
→ 신재생 에너지·온실가스 저감 지원산업 육성

- 선택·집중 원칙 하에 우선순위 저조 사업을 감축·폐지하고 긴급성·부가가치가 큰 필수 소요에 재원을 재배분

* 예: (국제기구 분담금) 실집행·정책 연계성 등 국익 기여도가 낮은 분담금 조정
→ K-방역, 신남방·북방, 한국판뉴딜 등과 연계된 분담금에 재투자

③ 재량지출 10% 구조조정

- 원칙적으로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% 구조조정 추진
 -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·패널티 부여
 - 구조조정 절감 재원은 중점투자분야의 신규·계속사업 소요로 전환

④ 보조·출연·출자사업 정비

- (보조금) 보조금 연장평가 등을 바탕으로 의무지출을 제외한 3년 이상 지원 보조사업 대상 존속필요성, 예산규모·보조율 적정성 등 검토
 - * 예: CPTPP(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 대비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
- 관행적 민간보조사업은 적정 수요관리를 위해 신규 자부담, 자부담률 제고로 민간의 책임성·자율성 강화
- (출연금) 3년 이상 관행적 지원 출연사업은 정책목적의 달성, 사업성과 등을 집중 검토하여 존속여부 및 적정소요 결정
 - * 예: 타당성이 미흡한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,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
- (출자금)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출자사업은 기 출자예산의 집행실적*, 회수재원 재투자 계획을 포함하여 적정 신규 출자 예산 반영
 - * 기존 출자예산을 통한 자펀드 결성 실적 및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 현황 등

⑤ 집행부진 사업 조정 및 공공부문 비용 절감 노력 지속 추진

- (집행부진) 연례적 이월·불용사업은 집행을 제고 방안 마련하고, 집행개선이 어려울 경우 실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조정
 - * 예: 사전절차 지연 등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, 연례적 아불용 발생 등 규모조정 필요
- (공공부문 비용절감) 공무원·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4대 주요 경상경비* 등 운영경비 절감 추진
 - * 특수활동비, 특정업무경비(부서활동비), 국외여비, 업무추진비
- 전체 보조·출연기관 운영경비도 집행실태를 재점검하여 추가 절감

□ [전략 2]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

⑥ 국세 및 세외수입 증대 노력 강화

- (국세)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을 통한 비과세·감면 제도 정비 및 과세기반 확대 등 세입 확충 노력 강화
 - 고액·상습채납자 명단공개 확대, 은닉재산 현장추적 강화 등 채납관리 강화 및 불법·편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철저 과세
- (세외수입) 미수납액 추가 회수 등 세외수입 추가 발굴·징수
 - 채납관리 강화를 통한 사회보장기여금·과태료 등의 수납율 제고
 - 부담금 등 주요 수입원별로 경제여건 변화 반영, 최신 실적 통계 등을 활용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
 - * 예: 한은잉여금, 배출권 매각대금 등 → 거시경제여건 변화 등 반영하여 재추계
 융자원금회수액 → 최근 대출실적·융자회수율 등을 반영하여 재추계
 -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유휴 국유재산 개발·활용·매각 확대 및 세입이 크게 감소한 책임운영기관 등의 자체수입 노력 제고

⑦ 기금 및 민간투자재원 발굴·활용

- (기금여유재원) 재정 外 자금을 국고와 연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
 - * 예: 어선재해보험 손실보전준비금(해수부), 새만금지구 유지관리 적립금(농림부) 등
 - 기금별로 중장기 재정수지·적립금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여유자금의 공자기금 예탁 등 적극 확대
 - * 예: 주택도시기금,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
- (민간 투자) 대상시설 포괄주의 등을 활용하여 「한국판 뉴딜」 분야 新사업군 등 신규 민간투자사업 적극 발굴
 - 재정사업 중 민간의 창의 활용, 시설운영의 효율화, 신속한 사업추진 등이 필요한 경우 민자사업 전환 검토

□ [전략 3] 재정운용의 효율성·지속가능성 제고

⑧ 협업예산 확산을 통한 재정생산성 제고

- 사업 목적이 유사하거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다부처 연계 사업군은 부처 공동 사업기획·사업단구성 등 협업예산으로 패키지화 요구·편성

< 협업과제(예시) >

- ❶ 다부처 R&D : 「기초→응용→상용화」 주기별 협력
* (예) 신약개발: 기초(과기부) → 임상(복지부) → 사업화·허가(산업부) 등
- ❷ 미래혁신인재 양성 : 「실무, 고급, 글로벌」 분야별 혁신인재 유치·양성
* (예) 실무인력(고용부), 고급인력(교육부, 과기부), 글로벌(법무부·외교부) 등
- ❸ 자영업 구조전환 대응 : 재창업, 재취업, 자생력 강화 종합지원방안 마련
* (예) 재창업(중기부), 전직·직업훈련(고용부), 금융지원(금융위) 등

-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협업과제를 선정하고, 사업군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 합동으로 예산을 요구
 - 사업군별 특성을 고려해 협업방식을 구조화*하여 기획·집행·평가체계 구축
 - * ❶사업별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, ❷사업 주기에 따른 단계별 협업체계 구성, ❸신규 시스템 도입과정에서 협력체계 구축 등
- 창의적 협업을 통해 지출 효율화와 사업성과 제고가 기대되는 모범사업은 신규사업 우선선정·예산증액 적극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

⑨ 성과중심 재정운용, 유사중복 통폐합을 통한 재정 효율화

- (성과기반)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사업평가와 예산 편성간 환류 기능 강화
 - 「재정사업자율평가», 「핵심사업평가», 「보조사업 적격성·연장평가», 「일자리사업 평가」 등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
 - * 예: 자율평가 결과 지출구조조정안 마련 사업 반영, 보조사업 연장평가 '폐지·통폐합·감축' 결과 반영,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제고방안 함께 제출 등
 - '22년 예산부터 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관리를 실시하여 성과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예산과 성과의 연계성 강화

- (유사중복) 사업주체간 역할분담의 적정성, 연관 사업간 유사·중복성 등을 정밀 검토하여 부처간 사업이관·통폐합 등 사업구조 전면 재정비

- 부처간 유사·중복 우려사업은 사전 협의·조정을 통해 통폐합 후 예산요구

* 예: 교육부-고용부 평생 교육·직업역량강화,
산업부-중기부-국토부 스마트공장 R&D, 스마트산단, 산단정비·개조

⑩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총량 관리 강화

-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등 재정총량의 제도적 관리방안 단계적 마련·추진

- 지출효율화 및 재정수입 확충, 중장기 재정전망과 위험요인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

- 사업부처는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중장기 계획 수립시 반드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후 관련사업예산을 요구

- 최근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특별회계·기금은 중기 재정 건전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예산 요구시 제출

* 예: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, 고용보험기금, 관광진흥개발기금 등

3.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및 지출효율화 계획

(1) 보건·복지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코로나19·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 심화에 선제 대응
 - 기초생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, 취약계층 일자리 등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
 - 긴급복지 요건 완화, 상병수당 시범사업, 실직자 재취업지원 등 위기가구의 빈곤층 추락 방지
- ☐ 주거, 돌봄, 의료, 교육, 문화 등 부문별 맞춤형 복지 보장
 - 중형평형, 전세형 등 살고싶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
 - 비대면 돌봄, 긴급·틈새 돌봄 등 생애주기별 돌봄격차 완화
 - 공공·지역의료 확충, 건보 보장성 강화 등 보편적 의료접근성 제고
- ☐ 저출산 극복, 출산율 반등을 위한 양육지원 강화
 - 영아수당 도입, 첫만남 축하 바우처 도입, 부부공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 출산·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
 - 어린이집 확충, 방과후 온종일 돌봄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
- ☐ 'K-방역' 업그레이드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
 - 중증도·치료단계별 의료인프라, 방역의료물자 확충과 함께 범정부-민간 참여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구축
 - 공공의료기관간 연계, 필수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·지역의료 역량 확충
- ☐ 미래신산업·고용창출 효과가 큰 'K-바이오' 육성 가속화
 - 바이오분야 R&D·핵심인재 양성 투자 확대, 임상 빅데이터 구축·활용 강화, 비대면 건강관리 뉴딜 프로젝트 확산 등 차질없이 추진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, 복지전달체계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서 복지대상자 선별 및 부정수급·재정누수 방지
- ☐ 과다 의료이용 적정화, 급여체계 정비, 부정수급 관리 등으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·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

< 일자리 >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전국민 고용보험 등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및 사각지대 지속 지원
 - 특고·예슬인에 이어 플랫폼종사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, 소득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고용보험 체계 구축
 - 임시·일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속 지원 및 산재보험 보장성·접근성 강화
- ☐ 코로나 이후 변화된 고용·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일자리창출 적극 지원
 - 신산업·신기술분야 혁신투자 확대, 벤처·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
 - 취업 취약계층에게 비대면서비스·안전·돌봄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직접일자리 제공
- ☐ 디지털 기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에 선제적 대응
 - 비대면·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,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
 - 영세 소상공인의 원활한 업종전환 및 재창업을 뒷받침하고, 디지털·그린 뉴딜 관련 부문으로 재취업 지원
 -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확대하고 참여자에 대한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 직업훈련을 적극 연계 지원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집행실적과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예산을 과감히 폐지·축소
 - 한시·종료 사업 재원을 취업 취약계층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재투자
- ☐ 고보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 기금사업 지출효율화,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, 고용보험료 등 수입기반 확충 방안 마련

[2] 교육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교육을 통한 계층간 사다리를 복원·강화,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생애주기별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을 중점 지원
 - 만 3~5세 누리과정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고, 저소득층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확충
 -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준별·계층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, 초·중·고교생 대상 온라인 학습진단서비스 기반 고도화 지원
 - 저소득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장학금·근로장학금 등 지원 확대
 - 지역주민의 직업역량 향상 및 재취업 지원에 중점을 둔 지방대학·전문대학의 평생학습·직업교육 인프라 투자 확충
- 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대비 혁신 융합인재 양성 집중지원
 - 대학·기업·연구소 협업으로 신산업분야 디지털 교육컨텐츠를 개발·공유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활성화 적극 지원
 - 지자체·지역기업·지역거점대학이 연계하여 지역의 핵심인재를 자체 양성·취업시키는 혁신 생태계 구축
 -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사업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부처별 분산 추진 중인 특성화 대학(원)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사업 정비

[3] 문화 · 체육 · 관광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국민의 문화서비스 향유기반 강화를 위한 문화복지 확대 및 문화인프라 확충을 집중 지원
 - 문화소외계층 중심 문화향유 기회 확대, 저소득층 예체능 영재 적극 발굴 및 예술·창작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-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특화 문화프로그램 개발
- ☐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요 선점을 위해 국내·방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, 비대면·디지털 전환 등 관광산업 혁신 적극 뒷받침
 -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및 관광거점도시 조성 본격 추진 및 방한관광 활성화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홍보·마케팅 강화
 - 국립공원 생태관광 등 힐링·치유관광 활성화 및 실감형 관광 콘텐츠 확대 등 지역의 노후 관광지 재생·활성화
 - 한국 관광을 스마트 관광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관광 빅데이터 고도화·활성화 및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확대 지원
- ☐ 비대면·온라인 및 신한류 등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집중 육성
 - 새로운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비대면·온라인 문화서비스 개발, 인공지능·VR·AR 등 신기술기반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확대
 - 지속적 한류확산 및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·한식 등 중점 지원분야에 대한 기획, 마케팅·유통 브랜드관리 지원 강화
 - 영세기업이 많은 콘텐츠·스포츠·관광산업 재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·융자 및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전환 지원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기관·분야별로 분산 추진중인 실감콘텐츠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, 소액 다건형 문화분야 보조사업의 복잡한 과목구조 정비
- ☐ 박물관·미술관 신설 등 하드웨어 위주의 지원은 지양하고, 기존 시설의 디지털화·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투자 전환

[4] 환경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「2050 탄소중립」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뒷받침
 - 산업·공공·순환경제 등 주요 분야 온실가스 감축 지원, 탄소흡수원 발굴 등 저탄소 기반 경제인프라 구축
 - 전기·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충
 - 탄소중립 유망 산업·기업 육성을 위해 저탄소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탄소감축 인증체계 정비 등 탄소국경조정 대응기반 구축
 -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홍수·가뭄 등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를 고도화하고, 취약계층·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확대
 -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재정지원체계 마련
- ☐ 기후·환경 안전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 환경복지 증진 및 한국판 그린뉴딜 성과 조기 가시화
 -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(지방 ~'22년, 광역 ~'23년), 노후상수도 정비(~'24년) 등에 집중 투자
 - 산업·수송·생활 등 주요 분야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에 대한 저감 기술개발 및 설비 보급
 - 코로나 19 이후 급증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확충하고, 화학물질·악취·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지원
 - 유역별 통합 물관리, 지역 녹색산업 육성, 생태관광 등 환경 친화적 지역발전 인프라 투자 확대
 - 도시·하천·산림 생태복원 등 국토공간 녹색전환 투자 확대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수질개선시설(하수도 등) 사업군 등 일부 집행이 저조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효율화
- ☐ 물관리 일원화(국토부 국가하천 환경부 이관, '21.12월) 완료에 맞춰 유사·중복 사업 정비 및 사업구조 단순화·체계화

(5) 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
 - 태양광·풍력 등 신재생에너지, 수소 등 핵심 유망 에너지원의 생산·유통·소비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
- ☐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무역환경에 대응한 수출총력 지원체계 구축
 - 비대면·온라인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·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, 수출 시장·품목 다각화 지원으로 수출기반 공고화 지원
 - 우리기업의 국내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기업 보조금을 지원하고, 스마트공장·제조로봇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
- ☐ 주력산업 스마트·친환경화, 신산업 육성 투자 확대
 - 제조공정·산단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, 기업활동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, 설비투자 등 지원 확대
 - 시스템반도체·미래차·바이오 등 핵심산업 및 유망 신산업에 대한 R&D·사업화·인력양성 등 혁신생태계 조성 집중지원
- ☐ 혁신 소상공인 육성과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 강화
 - 스마트상점·공방·슈퍼 보급 확대,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·온라인화 촉진
 -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준비된 창업을 위해 점포정리→취·창업교육→사업화자금 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
- ☐ 벤처·스타트업의 스케일업, 해외진출, 고용창출력 제고 지원
 - 예비 유니콘 기업, 비대면·그린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분야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지원 강화
 - 우수 창업기업 대상 해외진출 자금, 멘토링 등 지원 확대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한시적·일시적으로 늘어난 중소기업·소상공인 긴급유동성 지원을 정상화하고, 혁신금융(모험자본 등) 집중 지원
- ☐ 다부처 분산 추진 중인 산업단지, 수출, 창업 지원 사업 정비를 통해 지출효율화 추진

[6] SOC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주요 SOC 기반시설에 대한 디지털化 추진 등 한국판 뉴딜 및 선제적 안전투자를 확대
 - 노후 교량·터널·철도·항만시설 개량 등 안전강화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(ITS), IoT 센서 등 설치로 예측기반의 대응력 강화
- ☐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인프라 등 대도시권 핵심 정주여건 개선
 - 출퇴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GTX 등 광역철도, 광역·혼잡도로 등 대도시권 주요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
 - 주요 거점간 환승센터 구축, S-BRT* 등 교통수단간 연계·효율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속 투자
 - * S-BRT: 교차로 입체화, 우선 신호처리 등을 통해 BRT의 정시성·속도를 지하철 수준 향상
 - 교통·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축적·검증된 스마트시티 기술·서비스 모델 확산에 중점
- ☐ 지방 광역도시권 육성을 통한 다극화·입체화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핵심교통망, 혁신거점산단 등 인프라 구축 본격 지원
 - 도로·철도·공항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국가기간교통망 조기 확충 지원
 - 도시재생 뉴딜·노후산단개발 등 지역 주거·혁신성장 거점 조성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도로·철도 등 SOC 투자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한 사업은 사업기간 및 연부액 조정
- ☐ SOC 운영 효과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는 한편, 스마트시티 성과 제고를 위해 다기화된 사업구조 효율화

[7] 농림수산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농·축·수산 분야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보
 - 인프라-생산-가공·유통-수출 등 농·축·수산업 전 과정에 걸친 디지털화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 확보
 - 스마트 팜 혁신밸리,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등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농어업 스마트화 촉진
- ☐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·어촌 활력 제고
 - 경쟁력 있는 청년 농·어업인 육성을 위해 진입·정착·성장 단계별 교육, 자금, 컨설팅, 창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
 - 농촌 공간정비, 어촌뉴딜300 등으로 농산어촌 정주여건을 쾌적하게 조성하고, 농어촌내 돌봄·주거·교육서비스 확충
- ☐ 농업·수산 공익직불제 안착지원 및 재해예방 강화
 - 소규모 농어가 소득안정 기능 강화 및 환경·생태·먹거리 안정 등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·수산 공익증진 직불제 안착
 - 농업기반시설 개보수, 농업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재해예방 및 재해피해 완충을 위한 사업 확대
- ☐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사전적·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강화
 -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및 기후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진 식량안보 기반 구축
 - 농업관측, 채소가격 안정제, 자조금단체 지원 등 사전적·자율적 수급기능 강화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부정수급 점검 및 공익의무와 관련된 기존 사업을 지속 정비하는 한편, CPTP* 가입에 대비 수산보조금 제도개선 추진
 - *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
- ☐ 어선재해보험 손실보전준비금 등 재정 外로 운영중인 자금을 국고투자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·활용

(8) R&D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코로나 등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지속
 - 국산 치료제·백신 등의 개발 지원을 지속 확충하고, 기초부터 상용화·평가에 걸친 전주기 개발 지원체계 구축
 -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를 위해 핵심전략품목(338+a개) 기술 개발,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지원
 - “포스트 반도체”를 이끌 미래차(전기·수소·자율차), 바이오헬스, 시스템반도체 등 BIG3의 고도화와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지속
 - 양자(퀀텀), 우주, 인공지능 반도체, 6G 등에 대해 선제적 지원
- ☐ 한국판 뉴딜 기반조성, 삶의 질 개선 위한 혁신과 도전과제 확대
 - 데이터 분석·처리 지능화,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, B2B 융합 서비스를 위한 5G+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투자 확대
 -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 고효율화, 수송·건축 분야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, 산업공정 청정기술 도입 등 탄소중립 투자 강화
 - 재난·안전, 미세먼지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분야의 R&D 강화
- ☐ 혁신인재 육성, 협업 R&D 확대 등 기초가 튼튼한 R&D 기반 조성
 -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실전형 고급인재 육성, 글로벌 인재 유치, 과기원 연계 지역혁신인재 양성 등 지원
 -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하는 국제 공동연구, 다부처 연계 투자, 국방 R&D 민간참여 확대 등 협업 활성화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국가출연연구소 임무·기능재조정(R&R)을 통해 정부출연사업을 정비하고,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지역기반 R&D 센터 등 정비
- ☐ 국가 R&D사업 관리 효율화를 위해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한 통일된 지원기준 마련,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에 연동·투명화

[9] 국방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첨단기술 기반 핵심전력 증강을 통해 안보위협에 대비하고, 스마트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2.0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지원
 - 핵·WMD 대응전력, 첨단 감시·정찰전력을 지속 보강하고, 위리어플랫폼·드론봇 등 미래전 대비 전투역량 강화
- ☐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방 R&D 투자 확대로 국방 핵심기술 확보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
 - 미래전략기술, 유·무인 복합체계, 드론·로봇분야 투자 확대로 첨단무기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
- 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분야에 적극 도입·적용하는 등 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운영체계 구현
 - 빅데이터·인공지능·네트워크 기반 유·무인 복합체계, 지능화된 감시-타격체계, VR/AR 기반 과학화훈련체계 도입 확대
 - 친환경 군용 수소차 도입, 에너지 절감 국방시설 건축 등 국방분야 고효율 그린 투자 가속화
- ☐ 장병복지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으로 사기 충만한 병영문화 정착 지원
 - 병봉급 인상,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, 4차 산업혁명기술 기초·전문교육 등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국방개혁 2.0에 따른 병력 감축과 연계하여 병 인건비, 급식·피복비 등 전력운영비 효율화 추진
- ☐ 첨단무기체계 도입시, 쏠주기 맞춤형 사업관리체계 도입으로 예산 절감 및 장비가동률 제고
- ☐ 무기체계 획득(방사청)과 후속 군수지원(국방부)을 연계하여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, 민군기술 상호 활용 확대를 통한 국방 R&D 중복투자 방지

[10] 외교·통일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전략적 양자·다자외교 수행, 국제무대에서의 국격·위상 강화, 재외국민 보호·안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투자
 - 미중갈등,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 동맹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, 효율적인 공공외교 확충
 - 전염병, 테러 등 해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외국민 안전 네트워크 강화, 해외영사 서비스 강화 지원
- ☐ 공적개발원조(ODA)는 공여대상 국가·분야별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및 지원효과 극대화
 - 신남방·신북방 등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그린·디지털 뉴딜, K-방역, 의료, 한류, 인력교류에 집중
- 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실화 및 평화통일 국민 공감대 확산을 적극 뒷받침
 - 남북관계 개선 대비 남북간 합의 사항 이행 준비 및 상생과 평화의 '한반도 생명·안전공동체' 기반 구축
 -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을 내실화하고,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지자체·주민 참여 확대 지원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국제기구 분담금을 실적·성과 평가에 근거하여 구조조정하고, 외교·통일 정책 우선순위 분야에 집중지원
- ☐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인도적 교류, 생명·안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 조정

[11] 일반·지방행정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지역의 인구유입과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여, 지방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, 포용적 지역발전을 뒷받침
 - 농산어촌·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가속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소멸위기 지역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
 - 지역균형뉴딜 사업은 지역경제 혁신거점 조성·확산 위주로 지원
- ☐ 모바일신분증 발급, 정부 24로의 민원서비스 창구 통합,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구축 등 디지털 정부의 가시적 성과창출 지원
 - 공공데이터 개방·활용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통해 민간의 인공지능·빅데이터 산업 발전 지원
- ☐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해 시범구매 대상기관을 대학·연구소 등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여, 혁신기업의 성장·도약을 지원
 -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로 혁신조달 대상 영역을 확장하고,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
- ☐ 경제·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 통계 아이템 발굴, 표본 개편 등을 적극 지원
 - 과세기반 확충, 납세편의 제공 등을 위해 조세행정 인프라 지원도 강화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위기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급증한 지역방역일자리 등 지자체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
- 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촉진 및 전산운영비의 합리적 책정을 통해 정보화 지출 효율성 제고

[12] 공공질서·안전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촘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·성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 및 범죄대응 강화
 -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·심리치료·사례관리 적극 지원, 지원체계 효율화 및 경찰의 현장조사 역량 강화
 - 디지털 성범죄·스토킹 범죄 등 신종범죄에 대한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강화
- ☐ 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·인프라 확충지원
 - 여성·아동·노인 등 범죄취약계층의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 및 인권수사를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
 - 교정시설의 과밀해소 및 의료처우 개선 등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
- ☐ 감염병 등 신종·복합재난 및 기후변화 대비 예방, 생활안전 투자 확대
 - 감염병 대비·대응 전문인력 및 검역장비·시설 확충 등 국가 방역 기반체계 구축 및 교통 SOC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강화
 - 기상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예보 인프라 확충 및 재해위험 지역 정비,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자연재해 대비 투자 확대
 - 어린이·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, 산업재해 방z시설 보강,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등 국민생명보호 투자 지속 추진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하도록 관련 기관 운영비,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
- ☐ 재난안전사업 평가 및 사전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유사·중복사업 및 재해예방 효과 미흡 사업은 투자 축소

〈 안전투자 〉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감염병 등 신종·복합재난 및 기후변화 대비 예방투자 확대
 - 감염병 대비·대응 전문인력 및 검역장비·시설 확충 등 국가방역 기반체계 강화
 -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원, 저탄소·녹색산단 조성 등 그린뉴딜 투자 확대 및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기후변화 대비 대응능력 제고
- ☐ 국민안전 체감도 제고를 위한 생활안전 투자 확대
 - 어린이·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, 산업재해 방지시설 보강,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등 국민생명보호 투자 지속 추진
 - 건설현장,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고위험시설 안전점검 강화 및 빅데이터 기반 화재예측, 화재조사 과학화 등 화재 대응능력 강화
- ☐ 노후 기반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
 - 도로·철도 등 교통 SOC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강화 및 댐·하천 등 노후 방재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적극 지원
 - 위험분야 선제적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 자원·정보시스템 종합 점검을 통한 고도화 추진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재난안전사업 평가 및 사전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유사·중복 사업 및 재해예방 효과 미흡 사업은 투자 축소
- ☐ 재난안전사업평가 및 사전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유사·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, ICT기술 기반 예방투자 확대로 사후피해복구비 경감

제2편
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

-
- ① (경제·사회여건) 경제 정상화 흐름 속 부문별 회복속도 차별화 및 디지털·저탄소 등 구조적 변화 가속화
-

※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

- ② (수입여건) 사회보험성기금은 증가세 유지, 사업성기금은 증가세 둔화
-

- 사회보험성기금은 가입자 확대, 소득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 등 증가세 유지 예상
 - 사업성기금 수입은 법정부담금, 융자원금회수 등의 증가폭 감소로 증가세 둔화 전망
-

- ③ (지출여건)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빠르고 강한 경제활력 제고, 미래 혁신투자, 新양극화 완화 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
-

- 공적연금급여 증가,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, 저소득·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 등 사회보험성기금 지출소요 지속 증가 예상
 - 문화·체육·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력 제고, 중산층·청년·신혼부부 주거복지 강화 등을 위한 사업성기금 지출 증가 전망
-

- ④ (기금 수지) 코로나 위기극복과정에서 주요 기금 재정건전성 저하
-

-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근로취약계층 고용·소득 안정(고보기금),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(중진기금), 소상공인 긴급 피해복구(소진기금) 지원 확대 영향 등으로 주요 기금 수지의 일시적 악화 예상

Ⅱ

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

1

기금운용 기본방향

-
- ①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투자 확대, 민생·포용기반 구축,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
-
- 대면 서비스업의 비대면 전환, 문화·체육·관광 등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지원
 - 디지털·그린 뉴딜 투자 뒷받침, 스마트·혁신 소상공인 육성 지원 등으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투자 확대
 -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 사각지대 없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, 맞춤형 주거·복지 확충으로 민생·포용기반 구축
 - 감염병 방역체계 확립·고도화, 아동학대 등 사회적 병리 해결을 위한 인프라 보강 등으로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
-
- ②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추계 내실화 등을 통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제고
-
- 위기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지출 정상화, 유사·중복사업 정비 등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자체수입 확충 노력 병행
 - 기금별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·정교화하고, 자산운용 관리 강화를 통해 기금 수익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
 - 기금의 목적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의 통합적 활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확대

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

- 코로나 이후 조속한 경제반등을 위해 골목상권, 관광·서비스 등 내수활성화를 적극 뒷받침
 - (소상공인진흥기금) 스마트상점·디지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·전통시장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
 - (관광기금) 관광빅데이터 고도화 등 관광산업 스마트화 및 코로나 이후 관광수요 회복을 위한 홍보·마케팅 지원 강화
 - (국민체육기금) 취약계층 생활체육 지원 확대 등 체육활동 참여 격차 해소 및 스포츠 기업지원 확대로 스포츠 산업 시장 활력 제고
 - (문화예술기금)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인원 확대 및 기초예술 분야 지원체계 정비 등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
- 중소기업·소상공인, 수출기업 등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지원
 - (신·기보기금)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중소기업·소상공인 긴급 유동성 지원을 정상화하고, 혁신금융(모험자본) 집중 지원
 - (무역보험기금) 한국판 뉴딜 산업 및 해외 대규모 사업(건설·플랜트 등)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강화
 - (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) 재해특례보증·성실실패자 재기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어가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지원

② 미래 혁신투자

□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전환 프로젝트를 적극 뒷받침

- (중소기업진흥기금) 환경산업·녹색기술 대상 융자,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등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
- (정보통신·방송발전기금) 인공지능·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비대면·5G 등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
- (산업기술촉진기금) 기술거래·사업화 인프라 조성, 공공R&D 성과물 이전 등을 통한 중소·중견기업 기술경쟁력 제고
- (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) 한국판 뉴딜 등 신유형 민자사업에 대한 확장적 보증공급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
- (대외경제협력기금) 신재생에너지·수자원 관련 그린 뉴딜 분야 및 ICT·디지털 정부 관련 디지털 뉴딜 분야 등 지원 확대
- (전력기금) 전력효율 향상 등 전력수급체계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·전력 계통연계 분야 핵심 R&D 지원

□ 2050 탄소중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신설 검토

-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,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 안정적 수입원 확보

③ 민생 · 포용기반 구축

- 新양극화 완화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
 - (고용보험기금)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, 평생직업능력 개발 지원 강화
 - (임금채권보장기금) 체당금 재직자 대상확대 등 체불근로자의 생계유지 강화, 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
- 서민 ·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할 · 자립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
 - (주택도시기금) 청년 · 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, 중형평형 확대 · 그린리모델링 등 품질 제고에 중점
 - (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) 중 · 장년층 월세보증 상품 개발 등 수요자 맞춤형 보증제도를 개선하고,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 지원
 - (범죄피해자보호기금) 아동학대 ·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및 심리치료 · 사례관리 강화
 - (장애인고용촉진기금) 근로지원인 확대, 중증장애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등 장애인 근로활동 적극 지원
 - (양성평등기금)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여건 개선, 여성폭력(가정폭력, 성매매 등) 피해자에 대한 상담 · 치유 등 지원 강화
 - (청소년육성기금)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,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기반 안전망 강화 지원

④ 국민 안전과 삶의 질

- 국민 보건·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, 산업 현장 안전 제고 및 산업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
 - (건강증진기금)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건강안전망 구축, 자살 예방 등 국민정신건강 관리 인프라 확충
 - (방사성폐기물기금) 2·3단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,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및 기술조사 등 집중 지원
 - (산재보험기금) 클린사업장 조성 등 작업장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산재병원 건립 등 산업재해 치료·재활 인프라 확충
 - (자동차사고지원기금)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 내실화,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 대상 확대 등 피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
 - (축산발전기금) 가축분뇨, 악취 등 축산으로 인한 오염 및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,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

① 사회보험성 기금

- 중장기 재정추계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위험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험요인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개선 추진
-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 기금수입을 확충하고, 기금운영비·사업비 등 지출 전반에 걸쳐 지출효율화 추진
- 고용보험기금 등 위기극복과정에서 재정적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기금은 중장기 기금수지·적립금 등 정확한 재정추계 전망과 재정건전화 방안을 예산 요구시 별도 제출

② 사업성 기금

-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 등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긴급 유동성 용자사업 정상화
- 기금별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, 기금 설치목적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통합재원으로 활용
- 기금 수지가 악화된 기금은 재정위험 요인 진단·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기금 수지 개선방안을 마련

③ 금융성·계정성 기금

-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 공급되었던 정책보증·용자사업의 성과점검 및 공급 규모 정상화 추진
- 보증관리 강화를 통한 대위변제 축소, 구상채권 회수 확대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금에 대한 운용배수를 안정적으로 관리
-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환류체계 구축

참 고 기금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점과제

☐ 기금 재원배분 개선 및 건전성 제고 관련

- 기금별 중장기 기금재정추계 내실화 및 정교화 검토

☐ 기금 수입 확대 및 지출효율화 관련

- 기금사업은 여유자금 및 자체수입을 우선 활용
-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타 회계 등 지원 최소화
- 기금 자체수입원 확충 방안 및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방안 검토
- 여유자금 증가 예상 기금은 기금 목적 범위 내에서 타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사업 이관 검토

☐ 회계·기금 간 전·출입 관련

- 타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관행적 전입 축소·폐지
- 기 지원된 정부 출연금은 해당 회계 등으로의 반환 추진
-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,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및 지원기간 등을 점검하여 적정 수준의 전출 규모 산정

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·수탁 관련

- 기금 내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확대 검토
- 불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(차입) 지양
- 기존 예수금은 기금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기 상환 추진
- 예수가 불가피한 경우, 이자비용 확보 방안 및 상환 스케줄 등을 점검하여 적정 수준의 예수 규모 산정